갈등조정자문위 활성화 '아직먼길'

설립이후 단 한건 처리…도, 2월 중 회의 개최 시·군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개점 휴업' 상태로 치부됐던 전북 갈등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 최원탁)가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의 공동 참여를 이끌어 냈으나 아직 '정상 영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3월 설립 이후 공식 안건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단 1건만 처리돼 '이름은 거창하고 소득은 없는' 기구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는 전북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회의를 2월 중으로 개최해 도내 시·군간 주요 갈등에 대한 사전 자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에는 1994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립된 전북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중재안까지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기구였으나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격하되고 이마저도 지금은 공중분해 됐다.

이후 2008년 전북도 지방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전북도갈등조정협의회는 35사단 이전분쟁이나 옥정호 개발규제 분쟁 등을 해결해 보려 했으나 합의점 도출은 커녕 공론화조차 시키지 못하자 2013년 1월께 '폐업' 했다.

이에 도는 곧바로 전북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같은 해 3월에 설립하고 올해 1월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한 4개 시·군의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남권 추모공원 분쟁은 제1기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2013년 3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 제2기 갈등조정자문회에 이르기까지 해결한 유일무이한 공식안건일 뿐이다.

이에 도는 이번 서남권 추모공원 분쟁해결을 계기로 전북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2월 중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실무협회 개최 후 미해결된 안건에 대해서만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상정 했던 방식을 진행중이거나 갈등이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 하는 등 능동적 갈등 대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구성된 위원회만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해도 권고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깊게 관여할 수도 없고 모두의 입장을 다 고려하다보니 대화와 타협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 하는 일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2만여명 채용 계획

지난해 보다 15%·2625명 증가 역대 최대규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18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 2만186명은 2015년 선발인원 1만7561명보다 15%(2625명)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육아휴직, 복지수요의 급증 등 신규충원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일반직이 총 1만7057명(7급 482명, 8~9급 1만6132명, 연구·지도직 443명)이며 특정직(소방) 2845명, 별정직 및 임기제 2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2621명을 선발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별 구체적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2월 중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총 2621명(전일제 2383명·시간선택제 2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6월18일 시행되는 지방직 8·9급 공무원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3~4월중에, 10월1일 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시도 별로 7~8월중에 각각 실시된다.

/이성주 기자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2일 도에 따르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노인취약시설·터미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등 결함발생 ▲주변지반 세굴 발생여부 등을 집중 살피게 된다.

이와함께 축산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식육취급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 내용은 원산지 둔갑·미표시 판매행위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무허가 등이다.

/정영수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총회가 2일 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열린 가운데 부회장을 맡은 송하진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 새만금 방문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2일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이날 새만금 신시33센터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신시배수갑문 등 방조제 주요시설을 안내하였다.

구 대사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현장을 둘러보고 세계 최장 방조제의 장대함에 감탄하며 새만금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제=곽노태기자

국민권익위 1430억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원 규모)가 적발돼 19명이 기소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비리,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에 이첩했다.

이들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43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를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가로 챘다는 신고를 접수해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이후 합수단은 관련 업체들이 사업비 110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적발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익위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주기자

긴급차량 미양보 과태료 인상

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때 양보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새만금사업에 항공레포츠 산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 기업을 새만금사업 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으로 정했으며,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각 가격을 예정 가격의 75%로 정했다.

이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 건설 공사 수주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공사 현장으로서 50km 이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배치토록 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5건과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이성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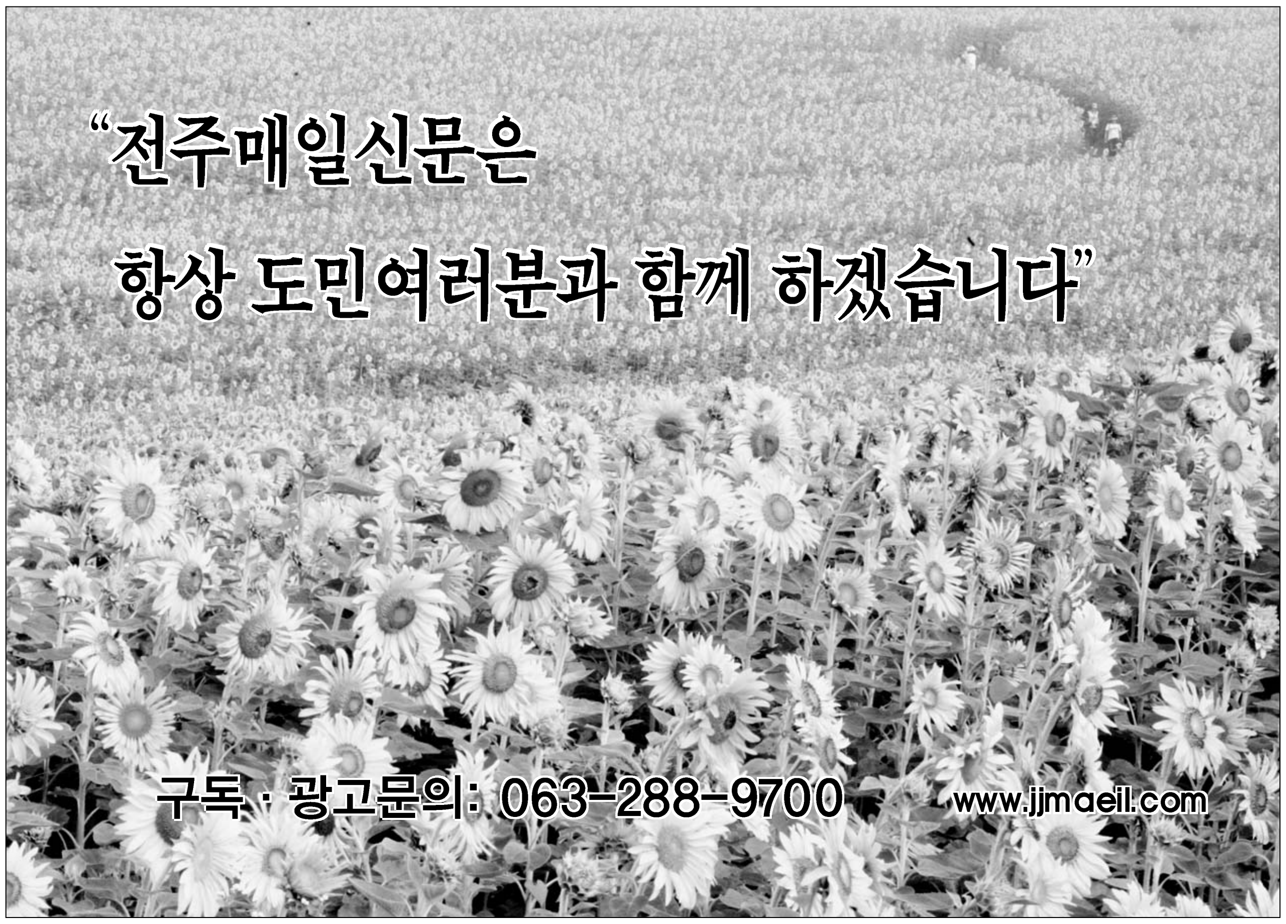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